

한국청소년연구 제 5호 1991 여름

한국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

- 1945~55년을 중심으로 -

이 광 호**

- I. 서 론
- II. 교육체제 재편의 형태와 특성
- III. 교육체제 재편의 교육·사회적 결과
- IV. 결 론

I. 서 론

1. 문제제기

오늘의 한국교육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뿌리깊은 문제 하나를 지적한다면 높은 대학진학 희망율과 여기에서 비롯된 과열입시 경쟁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부터의 원인진단과 문제인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인식방법의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규명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인식에는 궁극적으로 '문제의 기원에 대한 탐구'와 함께 '한국의 교육체제가 어떻게, 어떤 특성을 지니고 변화해 왔는가'하는 등의 물음들이 포함된다. 학교교육에 대한 역사적 의미 규명은 최소한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의 진단과 해결책 모색에 총체적인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역사적 의미가 일정한 교육의 역사적 이론체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학 연구의 당위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과제를 전제하여 1950년대 이후 현대 한국교육의 정초기라 할 미군정, 정부

*이 논문은 본인의 1991년도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일어난 학교 교육의 변화와 기능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육의 문제와 교육제도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런데 '80년대 중반까지는 당시의 사실 규명에 대한 교육학적 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가설이나 틀을 제시함이 없이 교육변화 전반의 역사적 개관을 통해 발전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교육 변화에 대한 발전적 의미 부여는 주로 일제 식민지 수탈교육으로부터 탈피가 곧 '교육의 민주화' 과정임을 부각시키거나(참조: 오천석, 1975; 박상만, 1950), 때로는 '교육체제의 재조직 또는 재구성'과 같은 물역사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조: Adams, 1956).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 교육사적 사실 규명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부터는 개괄적인 역사적 의미 부여의 차원을 벗어나 미군정의 교육정책적 의도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참조: 김인희, 1983; Lee Gil Sang, 1989; 이광호, 1985)과 당시 교육지배집단의 정치·사회적 성격의 분석(참조: 한성진, 1986; 유희원, 1987; 이숙경, 1983; 關英子, 1987; 정미숙, 1988)을 통해 교육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밝히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군정의 문화제국주의적 침투와 그 매개체로서 교육패권동맹의 성격과 활동을 밝힘으로써 현대 한국교육의 특성을 내인과 외인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참조: 한준상, 1983;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남아 있다. 즉,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은 교육체제에 부여된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일제 식민지배를 관찰하기 위해 교육체제 내적 구조에 다

양하게 설정되었던 학교수준별 형태는 해방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변동의 논리와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각급 학교, 즉 초·중·고등교육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상호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야기된 교육적·사회적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들 속에는 해방 이후 일정 기간동안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그 변동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를 밝히며, 그것의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탈식민화 이후 교육의 내적 구조가 일정하게 재편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체제의 발전 양태와 수준별 관계 및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와의 관련성, 변화의 속성과 논리 등이 일정한 역사적 개념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한국사회와 같이 근대사회의 이행과정에서 식민지 과정을 겪고 탈식민화 이후에는 또다시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통치형태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 있어서 서구사회와는 다른 제도적·조직적 특성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화적 풍토나 체질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기저와 교육체제 간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의 성격을 전통적 문화풍토와 관련시켜 파악하기 보다는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각 하위체제들의 특성과 그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인문

숭상주의나 학력지상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한국의 문화적 풍토와 결부되어 표출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해방 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하위체제들의 재편양태와 특성등이 교육에 관련된 문화적 풍토와 관습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방 직후 한국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형성된 각 하위체제들의 형태와 특성이 어떠한고, 직업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체제의 독특한 한 형태로서의 교육체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교육체제의 형성사적 접근은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대안을 개발하고 사회개혁의 가치있는 실천 도구를 찾아내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교육체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교육 실제에서의 다양한 정책제안의 성패를 예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참조: Ericson, 1982: 292).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사회 각 부문의 균형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한국사회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에 대한 기능론적 인식보다는 구조론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과제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각 하위체제, 즉 초·중·고등교육체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화했으며 그 분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수준별 학교체제 간에, 학교교육과 직업체제 간에는 어떠

한 상호 관계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셋째, 해방 후 교육체제 재편과정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교육적 기본 원리는 무엇이며, 또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무엇인가?

2. 연구과제 인식의 관점과 방법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체제 형성의 구조적 특성과 그 형태를 밝히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교육체제와 경제 및 정치구조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필요나 산업적 요구를 강조하거나 지배계급의 의도성을 만능적이고 배타적으로 부각시키고 상정하는 기능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 요인과 교육체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 요인들이 교육체제의 구조적 형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때 교육체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초·중·고등 교육체제의 특정 부문이 강조되거나 중핵적인 의미와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그 부문의 조직적·제도적 형태와 성격이 특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육이 지닌 갖가지 특성과 문제의 일부 부분은 전적으로 정치·경제 부문의 반영이거나 특정계급의 만능주의적 의도의 결과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설혹 특정 부문에 그러한 반영이나 의도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체제의 자율적 변동력과 상호 규정에 의해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교육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체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경제적 필요와 직업적 수요 및 특정 사회집단이나 관료들의 의도는 변화의 방

향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그 과정 자체와 결과까지를 완전하게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교육문제와 교육적 특성을 파악할 때 특정 교육부문에서 경제적·산업적 요구나, 특정 집단의 의도와 이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밝히려는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체제의 하위체제들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인가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교육적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체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는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련성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시차 속에서 통일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체제의 각 하위체제들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조직적 형태와 상호 간의 관계는 비교적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체제의 구조적 분석은 교육체제 형성사에 대한 이해의 하나로써, 학교교육 제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형식으로서 학교수준별로 제도적 변천 과정을 분리하여 비체계적으로 나열하는 식의 제도사적 접근 방법과는 구별된다.

둘째, 교육체제의 변화는 경제적 요인보다도 사회적 효과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의 관점이란 교육이 사회의 위계적 조직을 어떻게 영속화하고 강화시키는데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교육체제의 변화는

각 하위체제들의 능력-특정 시기에 교육이 사회적 위계를 영속화하고 강화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합법화함으로써 기존의 위계적 사회관계의 재창출에 기여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때 교육체제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정교화되면 될수록 사회적 위계의 영속화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적 계 집단이나 개인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더욱더 학교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부터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를 포함하는 1955년까지 약 1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연구의 범위를 해방 직후부터 1955년까지로 국한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해방된 직후 미군정 하에서 교육구조의 개편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작업들이 계획되고 시도되었지만,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통치체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교육구조의 개편은 새로운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 정부수립 이후에야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수립후 불과 2년만에 한국전쟁을 겪게된 까닭에 교육체제 내적 구조의 재편성은 전쟁후에야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연구가 교육체제의 내적 구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학교제도나 형태의 신설, 변형 및 그에 따른 학교체제 간의 관계와 직업체제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각종 행정규제들의 제편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955년 2월 '대학설치기준령'의 공포는 해방후 한국 교육체제의 구조

개편에 있어서 완성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방후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부문이 1차 팽창기(1946~48년)와 2차 팽창기(1952~55년)를 거치면서 그 구조 형태가 고착되는 한편, 군정 말기부터 시도된 팽창억제 계획이 대학설치 기준령을 통하여 형식적인 규제로서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축으로 하여 체계화된 초·중등학교의 구조나 형태상의 특성들이 '50년대 초반 이후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 규제들, 즉 각종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1954년 4월)이나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이 완성(1955년 8월)되고 있기도 하다.

셋째, 해방 직후 고등교육 부문의 과잉팽창에 의해 대학교육의 공급이 과잉됨으로써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이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1955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진학률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이라 보고, 그 분기점이 되는 1955년을 해방 이후 교육재편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로 간주한 것이다(〈표 2〉 참조).

결국, 이 연구에서 해방 직후부터 1955년까지의 교육체제의 변화를 연구범위로 설정한 것은 한국 교육체제의 제도적 특성이 미군정기라는 시기에 국한하여 단절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1955년에 가서야 거의 완성적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변화가 완성되는 시점은 1955년의 진학률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성, 대학

설치기준령과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등의 법적 규정이 등장하는 시점과 일치된다.

II. 교육체제 재편의 형태와 특성

1. 보통교육의 확대 재편의 성격

해방 직후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패권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단보다도 주도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교육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세력은 일제하부터 고학력을 배경으로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등 특정 전문직에 종사한 집단이었다. 이들 교육주도집단은 한반도의 세계 체제로의 편입 및 지배력 확보라는 미군정의 의도와 자신들의 이해를 결함시켜 어렵지 않게 특정의 도전 세력을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들을 일반국민의 이익과 교육계를 대표하고 주도하는 당위적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심지어 미군정 초기에 대소(對蘇) 전략적 차원의 고려 때문에 본격적인 교육개혁의 착수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미군정 당국(참조: 이광호, 1985)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은 교육체제의 재편에 주력하였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정치적·교육적 이해를 국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학교교육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주도집단은 자신들의 동맹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일제하의 구 지배세력, 즉 지주나 기업가 및 특정 정치세력들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원·활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교육주도집단이 내세

있던 교육체제 재편의 기본원칙은 '교육에 있어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의 민주화'(참조: 오천석 1972; 1975: 3-6)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잔재의 청산과 교육 민주화의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교육기회의 확대개념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인식되어 자유의 원리(참조: 동아일보 1945. 12.;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80-81)로 집약되었다. 교육 기회의 확대나 기회균등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가장 적절하게 실현하고 표현해 주는 교육적 개념으로 선택된 것이다.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기회균등의 원리는 첫째, 의무교육 채택에 따른 보편교육의 실시와 둘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우수한 인재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교육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참조: 오천석 1975: 38-48; HUSAFIK 3: 104).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른 보통교육의 확대는 사회안정과 통합의 실현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일제 말부터 계획되어 온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해방직후 의무교육의 계획 및 법적 규정은 미군정 하 교육심의회 의 구상에서부터 정부수립 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성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기회의 균등이념은 제도적으로 초등학교의 통일을 가져왔다. 즉, 일제 말의 간이학교등 종전의 초등학교 수준의 각종학교를 전폐하고, 이들을 도지사 인정 사립 국민학교로 승격시켜 우선 공·사립 차별을 철폐하고 6년제 국민학교로 단일화하였다(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82).

이와 같은 의무교육 추진과 교육기관의 제도적 통일을 통한 국가주도의 보통교육 확대 노력은 특히 초등학교의 양적 확대와 취학률의 증대를 가져왔다. 일제 말기 약 50%정도에 머물렀던 국민학교 취학률은 1946년 4월 65%로 증가하였고, 1949년 말에는 약 85%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46. 4. 22). 셋째, 보통교육의 확대 노력은 중등교육 부문에서도 수학년한의 연장과 제도적 통합을 가져왔다. 해방직후 미군정과 교육주도집단은 초등학교 부문에서는 교원의 조직이 비교적 용이하고, 좌우익의 대립과 같은 사회적 혼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민주주의적 교육으로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등교육부문에서는 대상 학생이 이미 일본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참조: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81-83; HUSAFIK 4: 538).

그 결과 미군정은 중등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노력으로 수업연한은 6년으로 연장함은 물론 중등교육기관의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중등교육의 제도적 재편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정은 6-6학제의 재편시도와 함께 군정청 문교부의 직제에서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보통교육국으로 통합하였던 것이다.

결국, 보통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재편은 초등학교의 기회 확대와 양적 팽창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장치로 작용하였다. 즉, 당시 초·중등교육의 재편은 교육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반영물이었다.

한편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교육의 대중화와 병행하여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교육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은 우선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평가방법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오천석은 당시 종래의 각종 학교 자격자를 선택하기 위한 입시시험이 과연 아동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공정한 척도가 되었는지, 또한 교사의 평점이 과연 공정하며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객관적인 선발 방법의 개발과 실시를 촉구하였다(오천석 1975 : 39, 44-45). 이를 계기로 입학시험이나 학업성취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시험도구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정부수립 후에는 중앙교육연구소의 설립 등을 통해 교육의 능력주의적 재편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물론, 구체적인 각종 객관식 평가도구의 개발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즉, 정부수립 후 문교부는 교육의 능력주의적 편성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얻고자 각종 적성, 흥미검사지의 작성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문교당국은 중앙교육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부 연구실에 각종 표준화 검사지의 제작을 의뢰하고, 작성된 표준화 검사를 전국 각 초·중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문교부, 1958 : 213).

이와 같이 각종 표준화 검사를 통해 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배분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직후 교육주도 집단이 교육체제를 민주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주도집단은 교육의 기회를 신분이나 부와 같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하되, 그 능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기회부여의 준거로 삼

고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력의 객관적 평가 노력은 그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교육재편 원리와는 달리, 이 의도가 당시 교육체제 재편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던 독특한 구조적 특성과 결합하여 학교교육이 어떠한 일원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교육적 조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2. 고등교육체제의 재편과 상대적 과잉팽창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적 편성의 노력은 초·중등 교육체제의 확대재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등교육은 해방 후 교육체제 재편의 중핵적 부문이었다. 고등교육이 교육체제 재편의 핵심부문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곧 고등교육팽창의 원인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체제로의 편입과 일정한 지배력의 확보라는 대(對)한반도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등교육 부문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즉, 가까운 장래에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만 하는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 즉 반공보투의 구축을 위해 친미적·반공지향적인 중심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이해는 미군정기 국대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후원 및 정부수립 후 각종 원조를 통한 고등교육에의 집중적인 지원 등으로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참조 : 한준상, 김성학 1990). 특히, 한국교육의 재편을 조언하기 위해 미군정기부터 내한하기 시작하였던 교육사절단들은 한결같이 고등교육 부문의 확대와 개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1947년 6월 미 국무성과 국방성이 공동으

로 파견하였던 「대한 교육·정보조사단 *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Survey Mission to Korea*, 통칭 안트미션 *Andt Mission*」은 당시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등교육의 정체(停滯)를 비난하고 최고의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국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국내에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시설 및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확충을 강조하고 그 한가지 방도로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였다(대한민국문교부, 주한미군경제협조처 1960: 5-6).

둘째, 식민지 하에서 양극화된 사회계급의 대립관계 속에서 해방 후 공동으로 방위해야 할 경제적·정치적 이해를 가진 분할된 집단—지주, 기업가 및 관료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등—의 연합으로서 구 지배세력 또한 고등교육 부문의 재편에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해방 후 냉전체제 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주요한 명분으로 하여 한민당의 결성 등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여전히 특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 지배세력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세력의 공세나 농지개혁과 같은 농민해방 요구 등의 정치적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함은 물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해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즉, 학교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구의 하나로 판단된 것이었다.

한편, 일제 하의 관료직에서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이 연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교육의 지위·신분 결정력이 상승되긴 하였으나, 궁극

적으로 이들은 총독부 권력에 의해 상당한 정도 폐쇄적으로 지위·신분의 보장을 후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교육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표방된 기회균등의 원리는 학교교육의 직업 및 지위·신분의 결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그것은 구 지배세력들이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사회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정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구 지배세력과 교육주도집단이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우위를 견지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최고 교육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 그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위신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풍토로 인해 구 지배세력의 고등교육에의 참여는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주, 기업가, 일제 하의 관료출신, 그리고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합인 구 지배세력은 각각의 집단적 성격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이해와 참여의 방법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 의료 및 법조계나 일제 하에서 관직 등에 종사한 전문직 엘리트들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의 세력 등의 도전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느 집단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민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엘리트들은 미군정의 후원 하에 구 지배세력, 즉 지주층과 일부 기업가를 동맹세력으로 하여 각종 정치적 도전을 무마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재편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등교육은 그들의 정치, 사회적 이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부

문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또한, 일제 하에서 지극히 폐쇄적이고 억제되었던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체제의 재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도 최적이라고 이들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군정과 구 지배세력 간에 일치된 정치적 이해는 대학의 사명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정당화하였다. 즉, 교육주도집단은 한국 대학의 사명은 첫째, 학술하는 사람의 양성, 둘째 지식을 응용·연구하는 사람의 양성, 셋째 지도적 인격 소유자의 양성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고등교육기관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했다(참조: 한준상 1983: 270). 이러한 고등교육의 사명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적 편성이라는 교육재편의 기본원리와 결합되어 당시 각 대학의 설립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었다. 즉, 미군정하에서 새로 설립된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청년에게 심오한 학술을 배양하여서 국민 대중의 지도자 될 소질과 국가 유용의 인재를 육성[국민대학 건립취지문(국민대학30년사 편찬위원회, 1976: 71-72)]하는 데에서 그 설립의 취지를 찾고 있었다. 당시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설립 취지는 정부수립 후의 재정·공포된 교육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졌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고등교육의 재편 과정은 미군정기에 ‘대학계획(the great schools plan)’에 의한 개편을 시작한 이후 1955년까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도적 형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방 후 최초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편 시도는 1946년 초 문교부 고등교육국에서 계획한 ‘대학계획’에 의한 것이었다(참조: HUSAFIK 4: 566-568). 대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령’과 ‘학위령’을 골간으로 하고 ‘대

학설립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학위령은 서구의 기준에 따라 학위를 학사, 석사 및 박사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밖에 고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HUSAFIK 4: 566). 첫째,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둘째, 대학설립은 국·공·사립으로 하되 사립은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국립 종합대학의 학부 종류는 국가 원수의 명령으로 정하며 각 대학은 참의원회를 두어 학과와 강좌의 설치·폐지 등 대학 내부의 모든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내용은 국어, 문학사, 자연과학개론,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한다.

1946년 초부터 1948년 정부수립 이전까지의 기간은 이러한 대학령을 근거로 하여 일제 하에서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대학을 신설하는 등의 형태로써, 이 시기는 해방 직후 고등교육의 제1팽창기에 해당한다. 즉, 제1 팽창기의 특징적 형태는 대학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관·사립 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을 통·폐합한 국립 종합대학의 신설, 기존 사립 전문학교의 4년제 대학 승격 및 일부 종합대학의 신설 등의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그 결과, 해방 당시 19개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생 7,819명에 불과하던 것이 1947년 12월 국립 서울대학교와 3개 사립 종합대학을 합쳐 31개 고등교육기관에 20,734명의 학생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설립별 내역을 보면, 국립 4개교, 도립 4개교, 사립 23개교였으며, 학교 형태별로는 종합대학 4개교, 4년제 대학 22개교(6년제 의과대학 3개교 포함), 2-3년제 전문학교와 대학관 등이 5개교였다(문교부, 1948: 80-82).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중에서 사립 대학이 전체의 약 74%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을 위한 관·공립 전문학교의 통·폐합과, 국대안 반대운동의 여파로 지방 일부 대학이 사립기관으로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대학설립의 봄’(김종철, 1979: 56), 또는 ‘너도나도 대학설립’(동아일보, 1946. 12. 3) 등으로 표현되는 제1 팽창기의 무수한 대학의 신설은 결국 대학설립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규제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1946년 말 급증하는 사립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문교당국은 당초 대학령에 의한 기준보다 상향조정된 새로운 대학설립 기준을 법령으로 공포할 예정이었다. 그 새로운 기준을 보면, 대학신설 기금은 적어도 1억원, 토지 133만평, 기존 대학의 경우는 기금 4,800만원, 토지 63만평 이상에 도서 5만권 이상으로 규정되었다(동아일보 1946. 12. 3). 그런데, 대학설립 기준의 법령 공포는 지연되어 한국전쟁 후인 1955년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당시 군정청 문교당국자는 그들의 동맹세력에 의한 대학의 설립을 오히려 국가를 대행하여 민족의지를 실현하려는 육영의지의 발로로 정당화하였다. 즉, 유억점 문교부장관은 ‘유지들이 탕재를 각출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못할 바에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 시작이 반이니 시작만 해놓으면 교육기관 경영자인 만큼 양심적으로 육성할 것’(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94)이라는 자유방임적 입장을 표명(참조: 김종철 1977; 이형행 1979)하였다.

한편 문교당국의 자유방임적 정책과 더불어 토지개혁을 앞두고 경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소유재산의 명목을 전환시키기 위해 교육재단에

토지를 기부하는 당시 지주들의 후원하에 서울과 각 지방의 전문직 엘리트들 주축으로 한 설립 기성회의 발족이 급증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급팽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고등교육의 제2 팽창기는 한국전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 1개교씩 국립 종합대학교의 설립을 선두로 하여 기존 사립대학의 종합대학으로의 승격, 각종 야간 및 초급 대학의 신설 및 각종학교의 정규대학으로의 승격 등이 특징적인 형태이다. 당시 각 도의 국립 종합대학교 신설은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대학설립 억제(참조: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154; 백낙준 1953: 288-289; 문교부 1958: 94) 등을 의도하였지만, 문교당국은 또다시 고등교육체제의 무계획적이고 단편적인 재편을 시도하였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지방 국립대학 설립으로 기대하였던 대학신설 억제나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자연도태 및 동일지역 국·공립대학으로의 통합 등은 단순한 기대효과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 분교와 1도 1개교의 국립대학 설치 방침은 결국 제2 팽창기라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확충의 빌미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특히, 당시 문교당국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단편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재편이라고 불릴만한 두가지의 조치를 통해 제2 팽창의 정책적 조건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는, 한국전쟁 기간동안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일꾼을 단기간에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야간대학과 2년제 초급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였다(문교부 1958: 94-95). 그런데, 이에 따라 설립된 효성여자 초급대학을 비롯한 12개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이 9개 대학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는, 문교당국이 한국전쟁 기간중 기존 사립대학들이 종합대학교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지할만한 합리적 명분을 갖지 못하였다. 정부수립 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4월 대통령령 제633호에 의한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의 잦은 개정과 빈번한 기존학교 개편 인가 조치는 각종 사립학교나 대학이 상급기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좋은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1950년 4월에 공포한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기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에 따라 기존 학교, 그중에서도 초급대학 및 대학에 대하여 1950년 3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그해 3월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다시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 학교에 관한 조치령」으로 기존 학교, 그중에서도 초급대학 및 대학에 대하여 그 해 12월까지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새로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8 : 214). 또한,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 공포 이후에 또다시 각급 학교는 설립 갱신을 문교부에 승인받아야만 했다. 각 고등교육기관 운영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빈번한 재인가 기회는 대학과 중

합대학으로 이행, 승격해가는 기회일 수 있었다(참조 : 중앙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0 : 173).

문교당국은 학과의 증설 및 대폭적인 정원의 확충과 함께 학생모집과 대학원의 개설 등을 별도 지시에 따르게 하는 한편 총·학장의 채용 승인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는 교육감독 조항만을 명시한 채, 그 승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문교당국에 의한 국립 종합대학의 신설은 제2 팽창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빈번한 재인가 조치는 대학운영자들에게 학교의 승격기회와 정원확보의 의욕 및 명분을 갖게 함으로써 팽창의 조건을 충실히 마련해준 셈이었다.

〈표 1〉은 연도별로 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고, 초급대학이 대학으로 승격하는 한국고등교육의 발전 형태와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52-55년까지의 두드러진 고등교육기관의 팽창 형태는 제2 팽창기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1, 2 팽창기의 고등교육의 팽창은 당시 언론에 ‘대학사태의 현상(大學沙汰의 現狀)’(동아일보 1948. 10. 17)으로 표현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 동아일보

〈표 1〉 제2팽창기 고등교육기관의 증가 상황(1950-55)

구분 연도	종별 고등교육기관수					학생수	교원수
	대학교	대학	초급대학	각종대학	계		
1950	4	28	8	7	47	11,358	1,100
1951	4	28	9	8	49	20,000	1,300
1952	8	27	9	10	54	31,342	1,823
1953	13	27	4	13	57	38,411	1,900
1954	13	31	7	15	66	62,663	2,400
1955	15	30	6	20	71	78,649	2,564

자료 : 문교부, 문교개관, 서울 : 문교부, 1958, p.96, 102.

〈표 2〉 각급학교 진학률의 변화(1950-58)

구 분	국민교-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인문계-대학)
1950-51	0.26	0.65	
1951-52	0.33	0.52	
1952-53	0.33	0.62	1.04
1953-54	0.42	0.62	1.03
1954-55	0.42	0.53	0.92
1955-56	0.46	0.50	0.85
1956-57	0.45	0.34	0.58
1957-58	0.45	0.29	0.51

자료 : 문교부, 문교개관, 서울 : 문교부, 1958, pp.67-68.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 풍문사, 1960, p.57.

(1948. 10. 17)는 제1 팽창기의 고등교육기관의 급증을 두고 '군정 시대에는 소위 "교제"만 잘 하면 대학 인가 딸기가 다른 나라의 중학 설립 인가보다도 더 쉬운 정도'라고 비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난립은 고등교육 부문의 상대적 과잉팽창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등교육의 팽창은 두가지 의미에서 상대적 과잉팽창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단계별로 볼 때, 초·중등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발전과 긴밀한 중등교육의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 과잉팽창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과잉팽창은 당시 각급학교 진학률의 추이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률과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을 비교해 볼 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2-53년도에 각각 33%, 62%이며 1955-56년도에는 각각 46%, 50%로서 대학 진학률이 중등학교로의 진학률보다 높다. 이러한 경향은 1956-57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45%와 34%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보다 높아진 이 시점은 이 연구가 설정한 교육재편의 완료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고등교육의 과잉팽창 현상을 잘 반증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진학률의 추이에서 볼 때, 당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이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2 팽창기인 1952년-54년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살펴보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1953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17,388명인데 비해 대학 입학자수는 18,041명(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 517)으로, 대학정원이 당해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4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1955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교육 재편 기간중, 특히 제2 팽창기에 주로 야기된 대학의 과잉팽창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일부 국립대학이나 유명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당시 각 대학들이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등교육의 과잉팽창 현상을 보여주는 또다른 근거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이 인가받은 정원만큼의 학생수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당시 한 대학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학생모집에 관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지원자가 적어 정원 미달이 되어 수시로 입학 을 허가하는 실정이 되었다. 학생의 수업료가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학교의 입학 지원자가 적은은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명지대학교1979 : 19).

또한, 1950년 초급대학으로 개교하였던 한 대학은 개교 당시 120명 정원에 겨우 47명만이 등록한 사태를 회고하면서, ‘당시의 대학, 특히 사학에서는 정원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무자격 학생조차 포함하여 지원하는 학생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상례’처럼 되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덕성 60년사 편찬위원회 1985 : 270-271). 이와 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은 자연히 자격 미비자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으로나마 운영,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당시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상황을 동아일보(1948. 10. 17)는 ‘대학생 중에는 자격없는 이도 많으며’, ‘국민학교도 변변히 마치지 못한 학생이 과반수인 대학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후 대학의 과잉팽창 현상은 두드러져 당시 고등교육은 ‘절름발이 대학교육’이라고 불리워질 정도였다. 절름발이 대학교육이라는 희극적 비유는 해방 후 한국 대학교육이 “교육을 위한 학교설립, 유지 보다는 학교자체의 설립, 유지

를 위한 다수 학생의 확보”(동아일보 1950. 1. 15)라는 역설적 현상을 풍자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의 팽창 원인의 하나가 일반 대중들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것(참조 : 강만길 1984 : 267 ; 오천석 1960 : 284-287)이라는 추정은, 설령 대중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컸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거나, 또는 고등교육의 팽창 정도가 대중들의 교육요구 수준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대중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당시 문교당국이나 대학 설립 관계자들의 대학설립 취지나 의욕을 대변 내지 정당화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당시 대학은 적어도 대중의 교육적 요구나 중등교육의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 확대·팽창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 받을 수 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로 대학교육의 상대적 과잉팽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해방직후 한국 경제의 발달 정도와 관련하여 볼 때, 고등교육 졸업자를 국민경제나 산업부문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비해 대학교육이 과잉 확대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문교 관료나 대학의 설립·운영자들은 해방 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한국 전쟁 후 단기간 내에 사회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서 대학설립의 정당성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 정당성 역시 과장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많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획득한 지식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 고등교육을 이수한 엘리트들은 국민경제의 수용수준을 넘어설 만큼

과대하게 양성되어 '교육받은 고등실업군'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 대학 졸업생의 취직난은 '갈 곳 없는 학사'들로 지칭될 정도로 첨예한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참조: 동아일보, 1949.5.23; 1949.8.19; 1950.4.10; 1956.3.16).

특히, 정부수립 이후 당시 대학졸업생의 주요 취업원이었던 국가 관리의 감원과 불경기로 인하여 대졸 실업군은 더욱 급증하였다. 1949년 사회부 노동국이 전국 주요 대학(이화·숙명여대, 광주의대, 대구의대, 한양공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생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졸업생 1,182명중 취직 희망자가 58%인 691명이었지만, 취업전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었다(동아일보 1949.8.19). 또한, 한국전쟁 직전의 대학졸업 예정자의 진로상황을 보면, 예정자 총 3,970명의 취업률이 각각 사회과학부 48%, 문화예술부 30%, 이공부가 20% 정도였다. 취업 내역을 보면, 사회과학부 48%, 문화예술부 30%, 이공부가 20% 정도였다. 취업 내역을 보면, 사회과학부나 문화예술부 전공자는 관공서, 은행, 회사, 중등학교 등이 주요 진출원이었으며, 이공부는 의과나 이공과에 한정되어 거의 대학원이나 연구실로 진출함으로써 취업률이 특히 낮았던 것이다(동아일보 1950.4.10).

이러한 대졸 실업군의 누적현상은 1949년 3월 사회부의 실업조사에서 파악된 총 89만 5천명의 실업자 중 약 14%에 해당하는 12만 5천 6백명이 소위 '인테리 실업'으로 집계(동아일보, 1949.8.19)된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고등교육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 대학교육의 확대가 산업계의 필

요성이나 일반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되기 어렵다. 이는 당시 고등교육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의 팽창이 오히려 경제적 필요에 선행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교육수요 정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 직후 대학 설립의 붐은 교육을 통한 강력한 정치적 통합이 필요했던 문교관료와 전문직 엘리트층을 위시한 지주 등 구 지배세력이 문교 관료집단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후원 하에 대학창설의 추진세력으로 편승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대학교육은 이들 추진세력의 정치적·사회적 이해에 따라 재편되어, 탈식민지 이후 요구되는 엘리트적 지위·신분 수여기능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대학의 과잉팽창을 가능케 했던 조건의 하나로서 우선 세계 냉전체제의 심화에 따른 정치적 이해를 내포한 미국의 후원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의 직접적인 교육원조나 교육전문가 등을 통한 고등교육 확대의 조언과 같은 지원이 대학교육의 과잉팽창에 배경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교육법의 잦은 개정에서 비롯된 빈번한 재인가 기회와 한국전쟁은 고등교육의 팽창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기회로 작용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고등교육 체제재편에서 비롯된 전문학교 및 각종학교의 대학승격 및 국립, 사립 종합대학의 설립형태는 고등학교 확대의 구조적인 특징이었다. 또한, 국가주도에 의한 종합대학교의 설립은 대학운영과 설립에 핵심적인 모델이 되었다. 결국, 각종학교와 초급 및 전문학교들은 대학으로, 대학은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고 이행하는 제도적 관행은 당시 고등교육의 재편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교육체제 재편의 교육적·사회적 결과 : 학교교육의 기능적 역할 변화

1. 중등교육의 역할변화

해방 이후 고등교육의 상대적 과잉팽창은 고등교육 자체의 역할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등 하위 학교교육의 기능적 역할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학의 과잉팽창에 따른 급격한 고등교육 희망욕구의 창출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중등학교 졸업자를 상대적으로 과잉 흡수하게 되었다. 즉, 대학교육의 팽창에 따른 자체의 흡수력에 의해 중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고등교육의 상대적 과잉 흡수는 중등교육이 그 자체로서 완성교육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제도적 통로로 기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중등교육의 기능적 역할은 교육주도집단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활용가능범위가 넓은 다재다능하고 융통성있는 노동인력을 형성하기 보다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중간통로로 구조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중등교육의 기능적 역할이 변화되는 양상은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의 중등학교 졸업자들의 진로상황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일제 하에서 중등학교 졸업자들의 졸업 후 진로상황을 살펴보면, 보통교육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중등학교나 실업계 학교 모두 큰 차이없이,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행정기관인 시·도 관리사무소와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사업체 등에 취업하고, 25-30%에 해당하는 소수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다(참조: 광주 농업고등학교, 광주농업고등학교 동창회 1989 :

〈표 3〉 해방 직후 경남여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 (1946년 6월 졸업)

진 로	인 원 (%)
전문대학 진학	19(16)
고급중학 진학	37(31)
교 원	17(14)
관공서 및 회사	4(3)
가 사	44(36)
계	121(100)

자료: 경남여고 60년사 편찬위원회, 경남여고 60년사,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 1987, p.93.

142). 즉, 일제 하에서 중등교육은 졸업자의 70-75%가 취업을 하는 완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는 점차적으로 중등교육기관의 완성교육적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제 1, 2 팽창기를 거친 1950년대 중반 이후 중등교육기관은 더욱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중간 통로화되었다. 즉, 해방 직후 1946년 6월에 졸업한 한 인문계 여자 중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을 보면 전체 졸업생 121명의 46%인 56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17%인 21명만이 취업을 하였다.

특히, 해방 직후 실업계 중등학교 역시 그 본래의 교육목적과는 달리 대학진학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해방 직후 실업계 중등학교들은 일제 하에서와 달리 대학진학의 준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한 여자상업학교의 진로교육상황은 이를 입증해 준다(참조: 서울여상50년사 편찬위원회 1976: 103).

· 학반, 학과 구성에 있어서는 1947년부터 문과와 이과 반으로 반을 구분하고 불어나 독일어 등 제 2외국어 를 선택하게 하여 진학에도 힘을 쓰니 대학진학률이

〈표 4〉 광신상업중학교 졸업생의 진로현황

진로	인원(%)
취업:은행, 관공서	20(40)
진학:서울외대·법대· 상대, 동국대, 세브란스 의대	20(40)
기타	10(20)
계	50(100)

자료: 광신70년사 편찬회, 광신70년사, 서울:광신중·상업
고등학교, 1975, p.165.

좋아, 여상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며, 그리고
주산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예술활동도 잘한다는 소
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었다.

중등학교가 6년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던 1949년도에 한 실업계 중
학교 졸업자의 진로상황을 보면, 〈표 4〉와 같
이 은행과 관공서 등으로의 취업이 40%, 진학
이 40%, 나머지는 교원, 회사원 등으로 진출
하고 있다.

1940년대 말경에는 실업계 중등학교 졸업자
들의 진로가 거의 절반씩 진학과 취업으로 나
누어졌다. 이러한 중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
은 1950년대에 들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인문계 중등학교 졸업자는 물론 실업계 중
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주로 상급학교에 진
학하게 됨으로써 실업계 중등학교의 본래 교육
목적과 취지는 크게 변질되었던 것이다.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진로현황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1950년 봄에는 …국내산업이 활발하지 못하여 취업문
은 극히 좁았다. 은행에서 인력을 좀 요망할 뿐이었
다. 그대신 대학 문이 일본인이 없는 바람에 넓어졌
다. 그러므로 00회 졸업생은 우수한 사람만 좀 취업

하고 대부분이 진학을 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동창
회, 1973: 68).

또한, 1950년대 초반에 한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진학과 취직 희망
에 대한 의견조사를 보면, 64%인 960명이 대
학 진학을 희망하였고 36%인 540명만이 취업을
희망하였다(부상 80년사 편찬위원회 1975:
228-229). 고등교육의 제2 팽창 현상이 끝나는
시점인 한국전쟁 직후에 실업학교는 본래의 교
육목적은 거의 상실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
기관화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실
업계 중등학교들이 취업보다는 진학 위주의 진
로지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 풍토는 대학진학이었다. 본교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진출 교육에서 대학진학 교육으로 바꾸
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진출 희망자 수보다는 대학진
학 희망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고학
년에 있어서는 문과, 이과로 분반하게 되었다. 이갈
은 진학열은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점차 대
학진학 희망자가 줄어들게 되어 1970년대에 들어오면
서는 고3 학급중 1개 학급만 진학반으로 하였고 1973
부터는 1개 학급 총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후부터
진학반은 자연 폐쇄되기에 이르렀다(서울여상50년사 편
찬위원회 1976: 112).

제00회 졸업생은 1953년 3월에, 제00회 졸업생은
1954년 3월에 졸업했다. 당시는 전란의 상처를 회복
하는 단계라 기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에 가면 징집이 연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전원이 진학희망이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인문교과
와 똑같이 하였다. 서울상대에 10명 정도, 연·고대
에 각 20명 정도씩 입학했으며 나머지 학생은 기타
사람대학에 쫓겨났다. 농촌출신으로 학비부담이 어려
울 듯한 학생도 전원 진학했다. 소를 팔아다 진학을
했으므로 방대해져 가는 사람대학을 보고 소 우는 소
리가 들린다고들 말했다(경기상업고등학교 동창회,
1973: 73).

중등교육이 이처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위한 통로로 제도화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유인 기제뿐 아니라 해방 이후 경제적 사정의 악화와 한국전쟁 후 산업계의 불황 등에 의해 졸업자들의 취업이 극히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이 커다란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하에서부터 한국인 중등학교 졸업자가 주로 취업할 수 있었던 분야는 관공서, 은행 등의 금융계 및 일부 회사와 학교의 신설·확대에 따른 교사직 등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취업가능 직종과 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해방 이후 경제적 여건의 악화속에 중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직종과 분야 역시 일제 하에서와 같이 관공서, 교육계 등의 정부부문과 은행 등 금융계통의 제3차산업부문에 주로 국한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취업부문이나마 한국전쟁 후 경제여건의 악화와 위축으로 말미암아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훨씬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의 가중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유일한 출구인 고등교육으로 졸업생을 유입시키는 통로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고등교육의 과잉팽창에 의한 고등교육 욕구의 조장과 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따른 취업난의 가중으로, 결국 중등교육의 기능적 역할은 제도화된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자의 취업률은 물론 지금까지 그런대로 진로의 창구 역할을 하였던 상급학교 진학마저 어려워져 진학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58년도 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현황을 볼 때, 취업률은 겨우 7%에 불과하고 진학을 또한 26%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졸업자의 67% 정도는 진로가 불명확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이렇게 저하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반 고등교육의 과잉팽창과 취업난의 가중으로 중등학교는 인문계는 물론 실업계 학교까지 대학 진학의 중간통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의 수용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만큼 인문계는 물론 실업계 중등학교 졸

<표 5>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상황(1958년 졸업)

진 로	인 원(%)
진학 :	
인문계	16
공업계	1
상업계	87
수산계	8
기 타	6
소 계	116(26)
취업 :	
관공서	1
은 행	16
회 사	10
기 타	6
소 계	33(7)
가사	237(52)
기타	71(15)
총 계	461(100)

자료 : 부산8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80년사, 부산 : 부산상업고등학교, 1975, pp.228-229

업자들에게도 대학진학의 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점차 인문계 중등학교가 팽창하기 시작하여 결국 대학의 수용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실업계 중등학교 출신 졸업자들은 인문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학기회에서 불리해지고 진학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당시 대학진학의 사회적·교육적 유인에 의해 중등학교도 연쇄적으로 확대·팽창하였다. 즉, 대학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중등학교를 이수하려는 중등학교에 대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중·고등학교도 아울러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등교육의 확대는 당시 사회적·경제적 요구나 필요에 대응하여 야기된 면보다는 교육체제 자체의 구조적 기제에 의해 창출된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등학교의 팽창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요구하는 인원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계 학교는 교육과정 구성이나 시간수 등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 진학 가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당시 실업계 중등학교의 대학 진학을 저하는 서울대학교 등 특정 종합대학을 정점으로 학문적 성공과 진학에 의해 교육체제가 일원적으로 서열화하여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인문계 학교에 비해 열등기관화한 결과이며, 또한 그 좋은 예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방 직후 중등교육은 인구의 증가, 정치·경제적 변화 및 한국인의 교육관 등 사회·문화적 제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그 기능적 변화

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부문의 과잉팽창은 중등학교 졸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 효과가 작용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따른 취업난으로 인해 중등학교 졸업자가 증전의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 조건이 밀어주는 힘의 효과로 작용한 결과, 이 양자의 힘에 의해 중등교육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준비교육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2. 고등교육의 역할 확대와 사회지배력의 증대

해방 직후 교육체제 재편의 결과로서 중등학교의 기능적 역할 변화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과잉팽창에 의한 대학 자체의 지위와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교육 및 법조계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의 형성·유지를 위해 비롯된 고등교육의 과잉팽창은 첫째, 대학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역할의 증대를 가져왔다. 우선, 한국 현대사회에서 대학 공동체는 대학의 학과구성면에서 고도의 학문성을 지닌 과목에서부터 예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과 및 전문적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회·과학·문화의 제 영역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대학이 한국사회의 모든 학문 및 기술, 기능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일종의 대학 중심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대학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서구 사회는 비교적 점진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근대적 기능에서 근대적 기술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근대적 기술은 주로 노동시장 내부에서 개발·향상되었고 산업·기술

기업 공동체의 현장훈련과 경험을 통해 축적·발전하여 왔다. 기술·기능의 개발과 향상은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기능·기술시험제도를 개발하여 자격증을 발부하는 등 기술 수준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의 노동시장은 기술·기능을 일종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시장의 성격을 띠며, 동일기능·동일임금이라는 전통을 노동시장 속에 형성시켜 왔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의 경우 일제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근대적 산업 및 경영기술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개발·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급속한 국가발전과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배집단에 의해 고등교육은 주로 토착기술의 개발보다는 서구에서 완성된 근대적 기술의 수입 통로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참조: 박세일 1984: 151-152). 즉, 서구의 기술·기능은 체계화된 지식의 완제품으로서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수입되었다. 이와 같은 지식 수입통로로서의 대학의 역할⁴⁾은 원조에 의한 대미 의존적 경제구조의 재편성과, 특히 고등교육에 집중된 교육원조 등으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둘째, 대학의 과잉팽창은 교육주도집단이 본래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표방하였던 최고의 인재·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보다는, 대학이 장래의 중간수준의 관리, 사무직, 기술직 노동자를 훈련·배출시키는 일종의 학력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 중앙교육연구소에서 1962학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9,8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별 취직상황 조사를 보면 이러한 대학교육의 역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졸자의 과반수 이상인 55%가 전문기술직에 취업하고 있지만, 사무직 18.9%를 비롯하여 나머지의 적지않은 비율이 중간 관리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가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 실시된 것이고 취업률도 38%에 달했던 현실이었던 데에 반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25-30%에 머물고 사회 경제적 여건 또한 악화된 조건 하에서 취업 직종이 거의 금융계·관공서·교육계로 한정되어 있었던 1950년

〈표 6〉 대학 졸업생의 직업별 취직상황(1960)

구 분	취 직 자 (%)
전문·기술직 종사자	
기술자	668(17.6)
교원	572(15.1)
의료보건기술자	413(10.9)
예술가·예능가	49(1.3)
기타전문직업종사자	409(10.8)
소 계	2,111(55)
관리직업 종사자	120(3.2)
사무 종사자	721(18.9)
판매 종사자	36(1.0)
농림·어업 종사자	17(0.4)
채광·채석 종사자	14(0.4)
운수·통신 작업자	24(0.6)
기능공·생산공정 작업자	17(0.4)
단순 노무자	-(-)
보안직업 종사자	91(2.4)
서비스 직업 종사자	8(0.2)
기 타	637(16.8)
총 계	3,796(100)

자료: 이문용, 정기석, 대학 졸업생의 동태조사,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68, p.28.

비고: 대학졸업자 9,896명 중 3,796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38%인.

대 중반 상황에서는 대졸자가 중간 수준의 사무·관리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는 해방 직후 고등교육의 과잉팽창으로 인해 어느 사회보다도 일찍이 대학학력의 기능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해방 직후 고등교육의 과잉팽창과 아울러 중등학교 졸업자들의 극심한 취업난의 가중으로 인하여, 대학은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일제·엘리트의 양성 역할보다도 오히려 중등학교를 이수한 과잉 유동인구를 잠정적으로 흡수·저장하는 소위 인력의 '저장소'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였다. 즉, 해방 직후 보통교육 기능의 확대·강화의 의도와 교육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야기된 고등교육 과잉팽창은 초·중등학교의 확대를 유발했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수용력의 한계를 넘도록 초·중등학교 이수자들을 양성해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학은 이들 초·중등학교 졸업자를 일시 수용하여 저장함으로써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업난의 사회적 불안을 유보시키는 한편, 어느 시기의 국가발전 경제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학의 저장기능과 인력 조건이 1960년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볼 때, 대학의 과잉팽창은 문화·사회적 역할 증대, 인재 양성의 유보 및 산업예비군의 저장소와 같은 대학 자체의 역할 변화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를 대학진학 준비기관화하는 등의 기능적 역할 변화를 수반하였다. 결국, 해방 이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을 통해 학교교육은 대학진학과 같은 학문적 성공 여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서열화되고 진학을 위한 중간 통로로서의 역할 등으로 제도화됨으로써 현대 한국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원형적 특성의 일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결 론

해방 직후 한국 교육체제의 재편과정과 그 특성을 논의할 때, 교육재편에 대한 교육사적 평가는 그것이 사회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조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교육주도집단들이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 해방 직후 빈약한 재정 조건과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일제 하의 극히 억제된 고등교육의 기회를 당시 국민들의 교육요구에 부응하여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가 오늘과 같은 교육대국이 되게 한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의 교육적 노력들은 교육방법 및 평가의 개선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교육체제의 재편 결과 일제 식민지 하와 비교할 때 학교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부분적으로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사회적 효과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체제 재편과정에서는 오늘날 한국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고등교육을 향한 과잉 교육욕구와 치열한 입학경쟁 등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을 배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높은 대학진학 희망율과 입시경쟁 교육이 사회적·교육적 문제로 대두된 데에는 지금

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왔던 문화적·사회적 요인들 이외에도,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형성된 교육 내부의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교육체제의 재편과정에서 고등교육 부문이 당시의 사회적 요구나 인력수요 및 중등학교 졸업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 팽창하였던 구조적 특성은 하위 학교교육체제의 기능이나 직업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당시 중등학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고등교육 부문이 확대·팽창됨으로써 중등교육은 과잉 확대된 고등교육의 끌어올리는 힘에 의해 자연적으로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중간통로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해방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공업부문의 위축 등 경제 부문의 침체로 말미암은 취업난의 가중뿐만 아니라 인력수요에 대한 고등교육 졸업자의 과잉공급으로 일제 하에서 중등학교 졸업자의 주요 취업원이었던 행정관리, 금융계, 교육계 등의 직업부문이 고등교육 졸업자에 의해 침식됨으로써 일종의 학력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 중등교육은 고등교육 진학지도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결국 중등교육은 고등교육 진학이라는 단일 가치로 자극되고 평가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실업계 중등학교는 그 본래의 교육목적과 취지를 거의 상실하고 인문계 중등학교와 동등한 단일 기준에 의해 자극되고 조직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문계 중등학교에 비해 열등기관화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압력을 받게된 셈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배태하고 있는 교육체

제 속에서는 중등교육 부문이 확대되고 보편화 되면 필수록 고등교육 진학 희망인구의 과잉공급을 창출할 뿐이어서 고등교육 입학경쟁은 고등교육의 확대정도에 관계없이 치열해질 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학력기능의 저하와 학력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교육체제가 보편적 단계에 들어설 정도로 확대·성숙되기 이전인 해방 직후에 이미 창출·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일반대중의 과잉요구는 이미 해방 직후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증폭되었거나, 교육체제의 구조적 특성이 학력요구를 선도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방 직후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교육기회의 확대와 중등교육에서의 보통교육 기능의 확대·강화는 사회적 효과 면에서 볼 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통교육의 혜택을 베풀고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줌으로써 일련의 민주적인 재편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체제와 학교교육이 '진학'이라는 단일 능력에 의해 일원적으로 서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적 열등아 내지는 사회적 결함자로 간주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제도화되면 필수록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의 역할을 중등교육에 부여하려는 사회적 압력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교육기회의 확대나 교육의 민주화가 아닌 교육을 통한 일종의 '배제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 직후 교육주도집단이 표방하였던 교육민주화는

교육체제 재편을 통해 집단의 이기적 목적의 관철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교육 이데올로기 *educational ideology*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해방 직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학교교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열망은 계층적 이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교육주도집단의 교육을 통한 합리적 '배제과정'과 학교교육의 일원적 서열화 구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정치적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전문직 집단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 유지의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에 의존하면 할수록 일반 대중들 또한 교육을 통한 '배제과정'으

로부터 탈락·소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의 배제과정에 적응하는 노력은 일정 기간까지는 국가발전과 전문집단의 이해를 실현가능케 하는 사회적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적응을 위한 경쟁력과 저력은 일정 시점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활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부문에서 생산력을 저하시키거나, 정치적 저항의 원동력이 되는 등으로 사회적 효과면에서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변모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문직 집단의 교육을 통한 집단 이기주의의 실현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동아일보
-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서울:창작과비평사.
- 경기상업고등학교 동창회(1973), 경기상고 50년, 서울:경기상업고등학교.
- 경남여고60년사 편찬위원회(1987), 경남여고60년사, 부산:경남여자고등학교
- 광신70년사 편찬회(1975), 광신70년사, 서울:광신중·상업고등학교.
- 광주농업고등학교 동창회 편(1989), 광주농업고등학교80년사, 광주:광주농업고등학교.
- 김대환(1981),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서울:한길사.
- 김인회(1983), "문화식민지 교육경향과 그 탈피의 몸부림", 교육과 민중문화. 서울:한길사.
- 김종철(1979), 한국고등교육연구, 서울:베영사.
- 대한민국 문교부. 주한미군 경제협조처(1960), 한국 국립 고등교육기관 실태 조사보고서, 서울:주한미군 경제협조처.
- 돌베개편(1988), 주한미군사 1, 2, 3, 4(HUSAFIK), 서울:돌베개.
- 명지대학교(1979), 명지학원30년사, 1948-1978, 서울:명지대학교출판부.
- 문교부(1947), 중등·고등교육기관 예록, 서울:문교부.
- 문교부(1948), 문교행정개황, 서울:문교부
- 문교부(1958), 문교개관, 서울:문교부
- 박상만(1959), 한국교육사 하, 서울:대한교육연합회.
- 백낙준(1953),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서울:문

- 교사.
- 부상80년사 편찬위원회(1975), 부상80년사, 부산 : 부산상업고등학교.
- 서울여상50년사 편찬위원회(1976), 서울여상50년사, 서울 : 학교법인 문명학원.
- 서울특별시 교육회편(1953-1955.1960), 대한교육연감,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회.
- 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1978), 성균관대학교사 1398-1978,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손인수(1987), 한국교육사 I, II, 서울 : 문음사.
- 오천석(1975), 한국신교육사(하), 서울 : 광명출판사.
- 유희원(1987), 미군정기 교육주도세력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교육개혁 시도의 한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85), 미군정의 교육정책, 강만길, 김광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 한길사.
- 이문용·정기석(1966), 대학졸업생의 동태조사, 서울 : 중앙교육연구소.
- 이숙경(1983), 미군정기 민주화의 성격과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한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행(1979), 고등교육정책의 변천사(1945-1978), 교육행정연구회(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백영사.
- 정미숙(1988), 초기 한국 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1948-1953),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교사 편찬위원회(1970), 중앙대학교사 1918-1968,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육십년사 편찬위원회 편(1960), 한국교육10년사, 서울 : 풍문사.
- 한준상, 김성학(1990), 현대 한국교육의 인식, 서울 : 청아출판사.
- 한준상(1983), 한국대학교육의 희생, 서울 : 문음사.
- Adams, K. Donald(1956), *Education in Korea 1945-195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Ericson, D.P.(1982). *The possibility of a general theory of the educational system*. Archer, M.S.(ed).(1982). *The Sociology of Educational Expansion*. London:SAGE Publications. Inc..
- Lee Gil Sang. (1989). *Ideological Context of American Educational Policy in Occupied Korea, 1945-1948*.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關 英子(1987), “미군정하에 있어서 한국인의 교육제건 노력”, 阿部洋 編, 해방후 한국의 교육개혁. 서울 : 한국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a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al -
System in the Reorganization Era; 1945-1955

*Kwang-ho Lee**

This study analyzed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Korean educational system from 1945 to 1955.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grasp how the educational sub-systems were differentiated, and patterned, and what social consequences were caused by the educational change. Her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esis was the problem consciousness that historical archetype of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s resulted from the structural pattern in the formation of school systems rather than social-economic factor.

Several consequences based on analysis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er education was over-expanded in comparison with the expansion rate of primary and secondary sector, and the need for human resources. Especially, this expansion was initiated by professional group such as teach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bureaucrat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heralded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Second, the prominent characteristic in secondary educational reorganization was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at was consolidated from last-period of Japanese annexation was continued after the Liberation.

Third,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was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educa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equal opportunities and educational meritocracy.

Fourth, secondary education was regarded as a stepping-stone for the entrance to universities at consequence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Furthermore, the vocational schools also emphasized the entrance to universities rather than vocational training.

Fifth, as the result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students was evaluated by the entrance to famous universities. Under this situation, the enlargement of educational opportunity does not mean the

*Korea Institute for Youth & Children Researcher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but the exclusion through education.

After all, although the process of educational reorganization brought about several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enlargement of opportunity in higher education and the innovation in educational evaluation, it caused some critical problems. That is, it caused excessive needs for

higher education. Most schools attached importance to college-oriented education. Students could find no other alternative way but to go on to a university. Consequently, the student who did not enter a school of high grade put out of the way and they were branded as a social defective or a man of no ability. Thus we may be interpreted Korean schooling as a process of exclusion.